

사학비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이서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육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교육비리나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학비리가 주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이 사학비리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상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 방송사가 사학비리 관련 이슈를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단순관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현상 기술에 주목하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은 주로 사립학교의 비리 감사와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검찰, 교육단체 등과 같은 감사감독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사건 전달 프레임과 개입 및 해결 프레임, 도덕적 해이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사학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주성 강조 프레임과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학비리와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관점과 태도의 재정립, 그리고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KEYWORDS 사학비리,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자주성, 공공성

* 본 연구는 2016년 9월 9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비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popoyami@jejunu.ac.kr, 주저자

*** choi0126@gmail.com, 교신저자

1. 문제제기

지난 6월 17일,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대해 나 의원이 나채성 흥신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20년 넘게 이사로 재직할 경험이 있는 ‘사학족벌’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성명을 낸 것이다. 엄밀히 말해 공직자윤리법상 저촉되지는 않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은 나경원뿐만이 아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몽준, 홍문종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라 언급되는 김문기 씨도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대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과 족벌 언론도 사학과의 ‘거미줄 혼맥’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이정환, 2016).²⁾ 이에 대해 김성재(2016)는 “사학비리의 근원은 사학 자체의 부정부패라기보다는 사학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권력의 탐욕과 타락”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생관계는 ‘봐주기’를 통해 서로의 연대를 강화시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학비리가 공생관계 혹은 족벌체제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내 부고발자 혹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학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쉽지 않다. 신분상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시스템 또한 사학비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의 한계로 사학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인들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알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1)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사립대 법인의 ‘족벌 세습’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가운데 조사한 138곳의 65.2%에 이르는 90곳에서 설립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 이사,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박겨용, 2010). 또한 학교를 가족의 재산으로 여기며 세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비리로 인해 설립자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부인이나 자녀들이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구조가 드러나기도 했다(아이엠피터, 2014, 3, 26).

2) 정치사불로거 아이엠피터(2014, 3, 26)는 “돈을 버는 사학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돈으로 한국의 언론과 정치계와 손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하고 그 개정안으로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 또 다시 언론과 정치계를 밀어준다.”며 언론과 정치계, 사학 간의 공생관계를 비판하였다.

3) 실제 한 대학의 교직원들은 “가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각종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교수와 직원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섰다(SBS, 2011, 12, 15)”고 고백한 바 있다.

사학비리는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가시화되고 공론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김성재(2016)는 “한국사회의 공중에게 큰 영향을 끼쳐온 기성의 대중매체는 왜 사학비리를 보도하지 않는 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학비리에 대한 보도를 통해 공공이슈로 상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중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경험의 제한으로 언론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공중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무의식 속에 집단기억을 저장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한다(박현식·김성해, 2014). 이는 언론이 사학비리를 어떻게 틀 짓느냐에 따라 공중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성재(2016)의 지적처럼 언론이 사학비리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공중은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부른다.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비리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물론 국공립학교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학교와 달리 국공립학교에는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의무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에 한정하여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학비리가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은 사학비리와 관계된 우리사회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립학교 관련 논의

사학은 교육기회의 확충, 인적자원의 개발, 국가사회의 발전 등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박거용, 2010). 특히 해방 이후 의무교육의 확대, 교육 수혜 대상의 확대, 평등 및 보통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인구가 증가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재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정부가 사학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홍덕률, 2006).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민 등, 2012).

‘사립학교법’은 1963년 6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에 대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은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 혹은 다수의 사인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의 차별성을 의미한다(박부권, 2008). 또한 ‘자주성’은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조직, 관리, 교육, 재정 및 회계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 지시, 감독, 규제와 간섭 등을 받지 않고 사학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덕, 2014). 사학의 자유, 사학의 자주, 사학의 자율이 복합된 개념으로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해 사학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이현청, 2001). 한편, ‘공공성’은 사학이 비록 사인 혹은 사법인에 의해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사익만을 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경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박찬주, 2009). 이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 것으로, 교육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니라 교육 수혜자인 학생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말한다. 즉, 한정된 자원을 사람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자원이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의 사리사욕에 의해 편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이유다(김용덕, 2014).

반면, 사학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규제의 틀에 묶어놓음으로써 학교 간의 구별은 물론 사립학교 간에도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정일, 2009; 이현청, 2001; 최수혁, 2006). 대표적으로 최수혁(2006)은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이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데에 사학의 존재 이유가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주요한 전제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자주성’과 ‘공공성’은 각각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김용덕, 2014). 자주성은 자유로운 개인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반면,

공공성에서 개인은 사회의 대리인이며, 사회는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름의 독자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김용덕, 2014). 그러나 이 둘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상승시켜주는 관계라 할 수 있다(장신근, 2014).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율적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은 공교육체제 내에서 사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박민 등, 2012). 이에 따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는 사학정책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사학에서 이 둘 간의 관계가 한쪽으로 심각하게 편향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성재(2016)는 2005년 12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태업을 통해 사학비리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대한 반대 이유로 “개방형 이사를 강제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학교법인 이사 중 1/4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은 외부인이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설립자의 견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들었다. 즉, 핵심은 사인에 의해 설립 되었으니 운영에 대한 자주성 또한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비리가 주로 학교법인 설립자 일가에 의한 족벌체제 중심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는 결국 학교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납용’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공공적 특성이 강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자본주의의 한 수단으로, 그리고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사학비리 당사자들에게 교육은 인간이 하나의 인격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 그들의 ‘사리사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주성에 대한 광범위한 허용이 교육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운영에 ‘국가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과 공공의 이익 추구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학의 자주성이 공공성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단의 비리는 학교에 커다란 손실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구조를 형성해, 이를 장기화하고 구조화한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홍덕률, 2006). 더욱이 사학비리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언론이 이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 공중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학비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이다.

2) 비리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미디어 프레임링 이론의 핵심은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여 보여준다고 이해하는 것이다(Epstein, 1973; Gans, 1979; Tuchman, 1978). 대표적으로 토크먼(Tuchman, 1978)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해석하여 재구성한 현실을 뉴스로 보고, 이러한 뉴스를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뉴스가 특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닌 생산자들에 의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뉴스 프레임은 특정 현실의 일부를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특정 사안의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매체라는 성격상 소위 '그림'이 되는 영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매체인 신문에 비해 선택과 강조, 배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뉴스 프레임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못지않게 재구성된 현실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특정 대상에 대한 특성과 속성을 부각시키는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로 하여금 특정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이 사회 전체의 인식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션·최진봉, 2016; Kitzinger & Reilly, 1997). 또한 미디어가 프레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의미와 비중이 크게 인식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Entman, 1991). 이러한 차원에서 고프먼(Goffman, 1974)은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해석적 스키마라고 보았다.

이처럼 뉴스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 사건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뉴스 프레임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이서현·고영철, 2013).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일정한 경향성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의제로의 채택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수정·최은경, 2016). 이러한 차원에서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 프레임을 통해 수용자들의 인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책무이다(김성재, 2016).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학교 운영에 국가보조금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충당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가 존립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 관련 보도는 무보도로 일관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김성재, 2016), 사학비리에 대한 뉴스보도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유사한 주제로 기업비리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와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뉴스보도 프레임 연구가 있었다. 비리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로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고영신, 2007)와 삼성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연구(김남일, 2008), 그리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담론 연구(박현식·김성해, 2014)가 있다.

김남일(2008)은 삼성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인 KBS와 민영방송인 SBS를 대상으로 뉴스 프레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광고주로 꼽히는 삼성의 비리인 만큼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삼성과 방송사 간의 관계가 뉴스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 것이다. 분석결과,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되었고, 내용적 프레임에서도 사건공시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경우에는 김용철 변호사를 둘러싼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과 검찰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매체별로 대립 구조를 보이는 프레임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한 반면,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의 소유구조에 따라 프레임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두 매체 모두 비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는 소홀했던 반면, 내부고발자를 중심으로 한 흥미 요소를 부각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김남일(2008)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공익적 목표가 뚜렷한 사안에 대한 지상파 방송들의 보도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방송사의 성향에 따라 언론보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접근 방식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프레임 연구로 고영신(2007)은 정권별 대표 친인척 비리에 대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 뉴스 프레임을 비교하였다. 주요 비리행위자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과 삼남인 김홍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에 주목하였다. 뉴스 프레임 비교의 초점은 개별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과 정권과의 친소관계 등이 동일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뉴스 프레임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과 친정부 혹은 반정부와 같은 정권과의 친소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일 프레임 내에서는 보도의 초점을 달리하여 정치적 의미구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즉,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보도 프레임을 통해 권력을 감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성향, 권력과 개별 언론사 간의 친소관계, 언론사의 정파성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뉴스가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현식과 김성해(2014)는 정권별로 대통령의 사과나 기자회견이 있었던 사례를 사건의 생애 주기로 구분하여 어떤 담론들이 생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등 세 아들의 비리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회견, 변양균 비서 실장과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스캔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비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례였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과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르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정치적 색채가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리 관련 뉴스보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내용이 달라졌음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학비리 보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립학교법 제정과 개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인들의 일부가 사립재단과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사는 사학의 뒤엔 ‘정치인 병풍’이 있으며,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친사학’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경향신문, 2014, 9, 2). 실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재(2016)도 사학비리와 관련된 공론장이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보수정당의 지배를 받거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사학과 영합해온 대중매체들의 무보도”, 그리고 “이러한 사학 인식 프레임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매체들의 적극적 보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양극화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즉, 사학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언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진보언론 간의 이분화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2016) 또한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 장악된 지 오래였으며, SBS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YTN 역

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JTBC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상파와 뉴스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성격이 다른 텔레비전 뉴스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뉴스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사학비리 관련 연구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둘러싼 개념 논쟁과 사학비리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여론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사학비리 같은 문제는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가시화되고 공론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를 공유하는 창구가 바로 뉴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김수정·최은경,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이 현실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이 뉴스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보원이 누구인지, 어떤 프레임으로 틀 짓기를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연구문제 1.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주요 정보원은 누구이며,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주요 프레임은 무엇이며,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방송사별 보도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뉴스전문채널인 YTN, 종합편성채널인 JTBC 등 5개 언론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⁴⁾ 분석기

4) 시사HN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질문에 KBS라

표 1. 방송사별 분석대상 뉴스

방송사	KBS	MBC	SBS	YTN	JTBC	합계
건수	33	48	36	37	19	173

간은 방송사별 공통된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SBS가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인 약 5년 6개월 동안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뉴스를 추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 다시보기를 검색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송뉴스 분석은 방송사별 동시간대 혹은 대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사학비리 관련 방송뉴스의 경우, 보도건수가 많지 않아 방송사별 대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각각의 방송사에서 보도한 모든 사학비리 관련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⁵⁾ 검색어로는 사학비리, 사학재단, 비리대학, 비리학교, 학교비리 등을 활용하였다. 검색을 통해 추출된 기사 가운데 동영상 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사학비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중복된 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텔레비전 뉴스는 <표 1>과 같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균 20개의 뉴스 아이템이 다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5년 6개월 동안 보도된 뉴스가 173건, 평균 34건에 그쳤다는 것은 사학비리 이슈를 많이 다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언론매체의 보도주기와 보도내용이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제 설정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수정·최은경, 2016), 사학비리 이슈의 사회적 중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유목

분석유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과 프레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 분석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상징적인 공론의 장에서 어떤 상징적 장치가 우위를 점하면서 여론의

고 답한 응답자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JTBC(26.3%), MBC(10.3%), YTN(7.3%), SBS(5.3%) 순으로 나타났다(미디어스, 2016, 9, 8).

5) 분석대상 방송뉴스에는 전형적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뉴스보도뿐만 아니라 심층보도 형식을 띄고 있는 뉴스보도도 포함되어 있다. 심층보도 형식의 뉴스보도는 KBS 2건, MBC 3건, SBS 0건, YTN 2건, JTBC 2건 등 전체 9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역시 그 길이가 전형적인 뉴스보도에 1.5~2배 정도였으며, 그 내용 또한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거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표 2. 정보원 유형

유형	내용
비리행위자	이사장, 이사, 행정직원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리행위에 가담 혹은 연루된 자
비리피해자	교수, 직원, 학생 등 비리행위자의 비리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감시감독자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정치인, 교육단체 등 사립학교의 비리행위를 감시, 감독하거나 검찰, 경찰 등과 같이 비리행위를 조사, 수사하는 기관 혹은 사람
기타	비리사실이 있음을 모르는 학교 내부구성원 혹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남일, 2008).

정보원은 뉴스에서의 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뉴스는 정보원의 발언 몇 마디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박재영, 2006).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누군가에 의해 말하게 하는 것이 뉴스라는 것이다(Sigal, 1986).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원은 보도문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의미들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남일, 2008). 즉, 정보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를 인터뷰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정보원 유목을 분류하였다. 먼저 사학비리와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에서 등장한 개별 정보원을 일일이 나열하고, 정보원들 간의 유사점을 찾아 묶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비리행위자, 비리피해자, 감시감독자, 기타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보원을 분류하였다. 정보원은 한 기사에 여러 명의 정보원이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나오는 순서대로 3개까지 중복 코딩하였다. 또한 하나의 정보원이 여러 번 등장할 경우에는 하나로 보았다.

뉴스 프레임은 뉴스가 어떤 핵심적인 틀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분석유목을 도출하기 위해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역적 방법으로는 기업비리를 다룬 김남일(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 유목 가운데 ‘사건공시 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을 참조하였다. 또한 귀납적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보도문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추출하고, 이를 유사한 것끼리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⁶⁾ 이외에 사립학교법의 핵심 전제이자 논쟁 이슈인 ‘자주성’과 ‘공공성’ 개념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출된 뉴스 프레임 유형은 사건 전달 프레임, 도덕

표 3. 뉴스 프레임 유형

유형	내용
사건 전달 프레임	단순히 비리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거나 비리사건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도덕적 해이 프레임	교육기관 설립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혹은 윤리성을 강조한 내용, 비리행위자 개인의 비리사실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시위 및 분규 프레임	비리행위자와 비리피해자 혹은 감시감독자 간의 갈등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비리와 관련된 주체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내용
법 제도 개선 프레임	법 혹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학비리 예방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묵인 및 유착 프레임	감독기관의 묵인 혹은 방관, 감독 소홀이나 부실감사 등 봐주기에 대한 내용, 사학과 기득권 집단 간의 유착관계에 관한 내용
개입 및 해결 프레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사학비리를 조사하거나 감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혹은 감독기관의 개입 의지를 강조한 내용
자주성 강조 프레임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한 내용 혹은 사학의 자주성 남용 및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공공성 강조 프레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 혹은 이러한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인간적 흥미 프레임	분노, 연민 등 감성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사학비리와 관련된 주체들의 사적인 이야기에 관한 내용

적 해이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 법 제도 개선 프레임, 묵인 및 유착 프레임, 개입 및 해결 프레임, 자주성 강조 프레임, 공공성 강조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등 9개 프레임이다.

프레임 측정은 프레임 코딩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프레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이서현 · 고영철, 2013). 이는 역피라미드 기사구조에서의 부분별 중요도를 고려한 방법으로, 뉴스 프레임이 뉴스기사의 헤드라인 및 앵커멘트에 등장하면 2점, 본문에 나타나면 1점, 본문에 나타나지 않으면 0점을 차등 부여한다. 뉴스의 구성방식은 인쇄매체인 신문과 영상매체인 방송이 갖는 매체 특성에 따라 그 형식은 다소 다르지만 유사성을 띄고 있다. 주요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앵커 멘트는 신문으로 치면 리드기사라 할 수 있고, 기자의 육성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신

6)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주요 단어와 표현들은 회계조작, 공금횡령, 뇌물공여, 입시부정, 불법 운용, 개인용도 사용, 채용 비리, 방만한 예산 운영, 비리 백화점, 도덕 불감증, 법인카드 개인사용, 갈등, 학생 시위, 분규, 비리 폭로, 보복, 묵인, 봐주기, 전관예우, 재취업, 방패막이, 수사, 감사, 사학비리 척결, 이사 구성, 사적 소유, 학교 환경, 강의실 환경, 이홍하, 이재용 등이었다.

문기사의 본문에 해당된다. 또한 기자가 간접 혹은 직접 취재한 인터뷰이들은 신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되는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코딩방법은 뉴스에서 등장하는 모든 프레임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레임별 중요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이서현·고영철, 2016).

내용분석은 연구자 1명이 하였으며,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 기사를 방송사별로 10%씩 무작위로 표집, 홀스티(Holsti, 1969)의 검증공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는 언론학 석사 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코더간 평균 신뢰도 계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 정보원

다음의 <표 4>에서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용된 정보원을 방송사별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활용한 정보원은 전체적으로 감시감독자(151건, 54.9%), 비리피해자(52건, 18.9%), 비리행위자(40건, 14.5%), 기타(32건, 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감시 및 감독, 조사를 하는 교육청과 교육부, 경찰과 검찰 등 ‘감시감독자’가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됐다는 것은 비리사건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발생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 등과 같이 주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시감독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비교적 많이 참고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비리행위에 대한 내용 혹은 비리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비리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등장한 것은 사학비리 피해자인 학생과 교

표 4. 방송사별 정보원(복수집계)

구분	KBS	MBC	SBS	YTN	JTBC	전체
비리행위자	5(9.6)	12(14.3)	7(13.0)	10(18.2)	6(20.0)	40(14.5)
비리피해자	13(25.0)	16(19.0)	5(9.3)	13(23.6)	5(16.7)	52(18.9)
감시감독자	30(57.7)	46(54.8)	36(66.7)	24(43.6)	15(50.0)	151(54.9)
기타	4(7.7)	10(11.9)	6(11.1)	8(14.5)	4(13.3)	32(11.6)
전체	52(100.0)	84(100.0)	54(100.0)	55(100.0)	30(100.0)	275(100.0)

수, 교직원 등과 비리행위자인 이사장, 총장 등과의 갈등 관계를 부각시켰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리행위자의 등장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은 비리행위자에게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기타에는 주로 학교 병원 관계자,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관계자 등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비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방송사별로는 KBS와 MBC, YTN의 경우에는 감시감독자, 비리피해자, 비리행위자, 기타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SBS는 감시감독자, 비리행위자, 기타, 비리피해자의 순으로 많이 등장했으며, JTBC의 경우에는 감시감독자, 비리행위자, 비리피해자, 기타의 순으로 많이 집계되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1~2건의 차이에 불과하여 정보원 활용 경향에 있어 방송사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2)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다음의 <표 5>에서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을 방송사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학비리와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사건 전달 프레임이 0.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개입 및 해결 프레임 0.69, 도덕적 해이 프레임 0.52, 시위 및 분규 프레임 0.32, 법 제도 개선 프레임 0.23, 인간적 흥미 프레임 0.18, 목인 및 유착 프레임 0.16, 자주성 강조 프레임 0.08, 공공성 강조 프레임 0.07 순으로 나타났다.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방송사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상위 3개 프레임인 사건 전달 프레임, 개입 및 해결 프레임, 도덕적 해이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인 교육기관과 검찰 등에서 제공한 사학비리 사건, 그리고 개인의 비리행위를 강조한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이 비교적 많이 등장한 것은 사학비리로 인한 비리행위자와 비리피해자 간의 갈등 관계를 강조한 뉴스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학비리 피해자인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시위현장은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사학비리로 인한 내부구성원들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 이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학비리와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한 프레임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레임별로 살펴보면, 95%의 신뢰수준에서는 방송사별 프레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인 및 유착 프레임($p = .060$), 사건 전달 프레임($p =$

표 5. 방송사별 뉴스 프레임

구분	분석기사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건 전달	KBS	33	0,91	,914	$F = 7,415,$ $df = 4,$ $\rho = ,061$
	MBC	48	0,94	,954	
	SBS	36	0,97	,971	
	YTN	37	0,43	,728	
	JTBC	19	0,89	,875	
	전체	173	0,83	,911	
도덕적 해이	KBS	33	0,39	,556	$F = 4,119,$ $df = 4,$ $\rho = ,079$
	MBC	48	0,38	,606	
	SBS	36	0,53	,696	
	YTN	37	0,65	,824	
	JTBC	19	0,84	,834	
	전체	173	0,52	,704	
시위 및 분규	KBS	33	0,33	,645	$F = ,803,$ $df = 4,$ $\rho = ,780$
	MBC	48	0,29	,683	
	SBS	36	0,28	,659	
	YTN	37	0,43	,765	
	JTBC	19	0,21	,535	
	전체	173	0,32	,671	
법 제도 개선	KBS	33	0,36	,699	$F = ,852,$ $df = 4,$ $\rho = ,511$
	MBC	48	0,19	,394	
	SBS	36	0,22	,540	
	YTN	37	0,16	,374	
	JTBC	19	0,21	,535	
	전체	173	0,23	,507	
목인 및 유착	KBS	33	0,15	,442	$F = 1,850,$ $df = 4,$ $\rho = ,060$
	MBC	48	0,08	,279	
	SBS	36	0,08	,368	
	YTN	37	0,35	,633	
	JTBC	19	0,16	,501	
	전체	173	0,16	,454	
개입 및 해결	KBS	33	0,55	,905	$F = 2,317,$ $df = 4,$ $\rho = ,554$
	MBC	48	0,79	,922	
	SBS	36	0,69	,749	
	YTN	37	0,59	,896	
	JTBC	19	0,89	,875	
	전체	173	0,69	,872	

구분		분석기사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자주성 강조	KBS	33	0,15	,508	$F = ,709,$ $df = 4,$ $\rho = ,167$
	MBC	48	0,04	,202	
	SBS	36	0,03	,167	
	YTN	37	0,16	,442	
	JTBC	19	0,00	,000	
	전체	173	0,08	,331	
공공성 강조	KBS	33	0,12	,415	$F = ,337,$ $df = 4,$ $\rho = ,357$
	MBC	48	0,06	,245	
	SBS	36	0,11	,319	
	YTN	37	0,00	,000	
	JTBC	19	0,05	,229	
	전체	173	0,07	,277	
인간적 흥미	KBS	33	0,18	,465	$F = ,318,$ $df = 4,$ $\rho = ,889$
	MBC	48	0,15	,505	
	SBS	36	0,19	,577	
	YTN	37	0,24	,641	
	JTBC	19	0,11	,315	
	전체	173	0,18	,525	

.061), 도덕적 해이 프레임($p = .079$)의 경우에는 90% 신뢰수준에서 방송사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1) 목인 및 유착 프레임

목인 및 유착 프레임은 YTN(0.3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지상파인 MBC(0.08)와 SBS(0.08)의 경우에는 평균(0.16)을 밑돌며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 및 유착 프레임은 교육청과 교육부 등과 같은 관리 감독기관 혹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리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 또는 수사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유착 관계로 인해 비리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YTN(2013, 4, 11)의 경우에는 서남대 설립자인 이흥하 씨를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 ‘봐주기 결정’이라며 비난하였으며,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던 교육부 사무관을 지방 국립대로 발령하게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하여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종용”하고 이러한 행위를 ‘검은 거래’의 대가라고 표현하는 등 사학이 교

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YTN, 2015, 5, 24).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권력과 행정권력, 그리고 사법권력 사이에 끈끈한 유착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교육관료가 퇴직 후 사학에 재취업하는 구조 또한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보도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YTN(2011, 9, 14)은 전직 교육관료들이 퇴직 후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로 재취업하는 전관 예우에 대해서 “비리사학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과의 유착관계가 오히려 사학비리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 KBS(0.15)의 묵인 및 유착 프레임은 평균(0.16)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사학비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감사가 ‘뒷북’이었다며,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 및 감독 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재단 이사장이 수 천억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적립금을 주식투자로 날리는 등 일부 사립대에서 부정과 도덕적 해이가 잇따랐지만, 교과부의 감사는 ‘뒷북’이었다(KBS, 2011, 6, 17)”, “김문기 총장 측 이사들과 나머지 이사들 사이의 갈등을 사실상 방조하는 등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뒤에야 수습에 나섰다(KBS, 2014, 6, 2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학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비리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KBS, 2014, 11, 20).

(2) 사건 전달 프레임

사학비리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사건 전달 프레임은 가장 많이 등장한 프레임으로 특히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인 JTBC에서 평균(0.83)을 웃돌며 높게 나타났다. 수치로 살펴보면, SBS(0.97), MBC(0.94), KBS(0.91), JTBC(0.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뉴스전문 채널인 YTN(0.43)은 평균을 밑돌며 가장 적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전달 프레임은 사학비리 사건에 대해 어떤 사건이 어떤 경위를 통해 발생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주는 프레임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극동학원 설립자 류택희 징역 5년…역대 최대 사학비리(MBC, 2013, 1, 17)”, “‘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각종 비리 무더기 적발(MBC, 2011, 6, 8)”, “홍익학원, 회계부정으로 131억원 불법 적립(SBS, 2012, 9, 26)”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도덕적 해이 프레임

일반적으로 비리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비리 행위 그 자체는 행위자의 도덕적 해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치나 도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학비리 관련 보도라고 하여 모든 내용을 도덕적 해이 프레임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교육기관 설립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윤리성 등을 강조하거나 사학비리를 특정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강조한 보도로 보았다.

주요 예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거액의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불법 유용했다는 내용(JTBC, 2014, 1, 16), 교직원 연금 부담까지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대학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내용(JTBC, 2013, 7, 5), “학생들은 해마다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내느라 등골이 휘는데 그 돈을 물 같이 쓰는 대학교가 있다”면서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로 명품시계를 사고 재단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등의 문제에 대한 내용(JTBC, 2012, 6, 12)이 포함된다. 또한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이사들의 대학 운영권 장악에 대해 “어떻게 사학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YTN, 2014, 8, 18).

이러한 도덕적 해이 프레임은 MBC(0.38)와 KBS(0.39)의 경우, 방송사간 평균(0.52)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SBS(0.53), YTN(0.65), 그리고 JTBC(0.84)의 경우에는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낙하산 사장 선임구조를 갖는 MBC와 KBS의 경우, 사학비리를 저지른 행위당사자에 대한 비난이 자유롭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무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김성재, 2016)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개입 및 해결 프레임

개입 및 해결 프레임은 비리사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발생한 비리 혹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여 그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개입 및 해결 프레임은 사건 전달 프레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프레임으로, 방송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JTBC(0.89)의 경우, 모든 프레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방송사들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프레임으로 확인되었다. 개입 및 해결 프레임은 주로 비리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하고 있거나 이행하겠다는 교육당국 혹은 검찰조직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예로는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 9곳을 대거 압수수색(JTBC, 2013. 6. 10) 했다는 내용과 같이 단순하게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비리 개연성이 높은 다른 대학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다거나(KBS, 2011, 7, 18), 문제를 일으킨 이사 전원을 퇴출시키고 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KBS, 2013, 7, 17)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비리사학을 적발해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MBC, 2011, 7, 19). 또한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알려주고(SBS, 2014, 12, 23),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파면조치, 검찰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SBS, 2015, 10, 4).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당국의 감사가 비리행위가 이미 견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상지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비리 전력 이 있는 김문기 씨가 대학 총장으로 추대되면서 학내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부가 마지못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YTN(2014, 11, 24)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결국 교육부가 상지대를 향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묵인 및 유착 프레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비리에 대한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전관예우 등 교육행정권력과 유착관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라 지적되고 있는 정치권력과 사학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뉴스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5) 시위 및 분규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은 주체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갈등 이슈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비리행위의 본질보다는 비리와 관련된 주체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프레임으로 주로 비리행위자와 비리피해자 혹은 감시감독자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학생과 교수들이 비리행위자의 행위를 규탄하며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주체 간의 갈등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은 방송사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JTBC(0.21)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었으며, YTN(0.43)은 평균(0.32)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거 사학비리 전력으로 퇴출되었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추대되는데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수업거부와 단식투쟁 등의 방법으로 반발하거나(YTN, 2014, 11, 24), 폭력 행사와 시험 부정 등 교육과 민주, 인륜에 반하는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는(YTN, 2013, 11, 29) 등 비리행위자와 비리피해자 간의 갈등이 강조되었

다. 또한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거나(YTN, 2015, 5, 12), 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형사고소를 강행하는(YTN, 2015, 10, 8) 등 교육당국과 비리학교 경영진 간의 갈등을 부각하기도 했다.

(6) 법 제도 개선 프레임

법 제도 개선 프레임은 고질적인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특히 사학비리와 같이 학교 경영진이 범망을 피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법 제도 개선 프레임은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레임은 방송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KBS(0.36)가 유일하게 평균(0.23)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MBC(2011, 6, 13)는 사학비리가 재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학이 교과부의 필수 감사 대상이 아니며, 20~30군데씩 감사대학을 추천하는 식이다 보니, 사립대학의 절반 정도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감사가 이뤄질 때에는 쉽게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된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비리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규제와 처벌이 너무나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과부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KBS, 2011, 7, 4). 이 외에도 비리사학을 퇴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단과 학교 비리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며(SBS, 2011, 11, 7),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발생한 학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거나(KBS, 2011, 1, 3), 부당행위를 저지른 학교 정보를 교과부에 통보해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보도하기도 했다(KBS, 2012, 1, 5).

(7)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사학비리와 관련된 주체들의 사적인 이야기에 주목하는 프레임으로 분노나 연민과 같은 감성적 측면에 치중한 프레임을 말한다. 이 프레임은 YTN(0.2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BS(0.19)와 KBS(0.18)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YTN(2015, 8, 24)은 사학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흥하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그 경위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또한 입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의 자살 사건을 자세히 다루거나(YTN, 2013, 6, 17), 입학 과정에서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사건을 상세히 다루었다(SBS, 2013, 5, 31). 이외에도 한 사립대학 이사장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학교 인수 비용

을 교비로 납부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다른 대학 총장과 친구 사이임을 강조한 뉴스도 있었다(KBS, 2016, 5, 24).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은 사학비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단순한 가십거리로 이슈화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8) 자주성 강조 프레임

자주성 강조 프레임은 공공성 강조 프레임과 함께 사학비리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과도한 남용이 사학비리로 이어져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프레임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자주성 강조 프레임은 YTN(0.16), KBS(0.15), MBC(0.04), SBS(0.03)에서 일부 다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프레임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주로 비리행위가 적발된 학교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부분 이사회 구성 및 총장 선출의 자율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사학의 자주성’을 근거로 상지학원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다거나(YTN, 2015, 5, 12), 반복되는 교직 매매사건의 근절을 위해 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한 ‘사립 학교 위탁 채용 제도’에 대해 사립학교 재단이 ‘사학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내용(SBS, 2011, 8, 31)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사립학교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세금과 수업료로 납부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입법화 시도가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YTN, 2012, 9, 26). 이처럼 사학들은 학교 경영에 대한 자주성을 갖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처리하겠으니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학비리는 대부분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이 대학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사진 구성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설립자의 친인척 혹은 측근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 이사들이 자신들끼리 모든 감투를 쓰고 심지어 그 직을 그들의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아이엠피터 블로그, 2010, 9, 13).⁷⁾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인 나채성 흥신학원 이사장이 무려 6개의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와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설립자의 자녀들이며, 친인척 등이 학교장이나 서무실 과장 등 주요 관리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9) 공공성 강조 프레임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학교가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거나 이러한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KBS(0.12)와 SBS(0.11), MBC(0.06)와 JTBC(0.05)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시설투자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가 이사장 등에 의해 불법 운용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의 공공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70만 원의 실습비를 내고 있음에도 기자재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비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공공성 훼손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규모 시위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KBS, 2013, 8, 9). 이러한 문제에 대해 KBS(2011, 7, 15)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보다 옛 재단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법적 논리에 치중한 결과”라 비판하였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순수하게 보호되어야 할 공공성과 교육질서가 일부 어른들의 불순한 의도로 훼손되고 침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들은 사립학교 설립목적과 인가조건에 알맞게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달리 말하면, 공공성 강조 프레임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이행해야 할 공공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는 텔레비전 뉴스가 사학비리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고 축소하고 배제시키는지를 통해 무엇을 이슈화하고자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학비리가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의 영역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언론보도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에 따라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어떤 정보원과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의 정보원은 방송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로 사립학교의 비리 감사와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검찰, 교육단체 등과 같은 감시

감독자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비리피해자가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비리행위를 저지른 비리행위자는 가장 적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주로 감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과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찰 등 법조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결과 위주로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학비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사학비리에 대한 뉴스보도를 주로 교육부와 법원 중심으로 구조화시키면서 단순 기술적 보도에 머무르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비리를 저지른 비리행위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리피해자 간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구조로 프레이밍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학비리 관련 뉴스 프레이밍에서도 방송사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학비리 관련 뉴스가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보도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고영신, 2007; 김남일, 2008; 박현식·김성해, 2014)와 달리 방송사의 성향이 뉴스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최근 공정화 보도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JTBC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모든 방송사가 사학비리 관련 이슈를 간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문제시되는 뉴스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사학비리와 관련한 텔레비전 뉴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뉴스 프레이밍은 전체적으로 사건 전달 프레이밍, 개입 및 해결 프레이밍, 도덕적 해이 프레이밍, 시위 및 분규 프레이밍, 법 제도 개선 프레이밍, 인간적 흥미 프레이밍, 묵인 및 유착 프레이밍, 자주성 강조 프레이밍, 공공성 강조 프레이밍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비리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교육당국과 법조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사학비리를 저지른 개인의 비리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하고, 사학비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구조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원 활용 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사학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한 보도 또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전달 프레이밍은 사학비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프레이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전달 프레이밍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학비리가 왜 발생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보다 사학비리 그 현상 자체에 대한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사학비리를 단순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남일(2008)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사학이 온갖 비리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언론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학비리가 주로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거나 교육기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이정환, 2016). 하지만 이러한 현상 기술적 뉴스보도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학비리를 피상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학비리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학비리 사건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학비리가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상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위 및 분규 프레임 또한 갈등 상황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프레임이다. 동시에 사 용에 유의해야 할 프레임이기도 하다. 비리행위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위 장면은 뉴스영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그림’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영상정보는 해당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언론이 집단 간의 갈등 상황을 영상과 함께 보도하는 경향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슈들에서 발견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과 프레임은 사학비리로 인한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을 단순히 해당 학교 내부의 갈등으로 제한하게 만들 으으로써 당사자 간의 단순대립과 갈등으로 국한시킬 뿐, 사학비리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뉴스 보도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과도한 영상과 뉴스 프레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적 흥미를 강조하는 프레임 또한 문제다. 사학비리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리행 위자들의 사적인 이야기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오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이슈의 개인화에 주목, 개인의 이슈를 부각시켜 중요한 쟁점을 간과하게 만들으로써 사학비리 문제를 가십성 이슈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실 현한다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학비리를 개인의 비리 행위로 제한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고착화 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이벤트성 보도로 접근하 여 사학비리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로 파편화하여 접근하는 보도는 지양해 야 할 것이다.

목인 및 유착 프레임은 사학비리에 대한 목인 혹은 유착이 있었음을 폭로하는 프레임

이라는 점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학과 관련된 기득권 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김성재(201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보수정당 혹은 사학과 영합해 온 대중매체’ 등 이들 간의 끈끈한 유착이 주된 문제로 거론된다. 하지만 분석결과, 주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 교과부와 사학의 유착관계가 전관예우 등 퇴임 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조계 등 사회 기득권층과의 관계가 학교 비리를 무마시키는 데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만 있을 뿐, 정치권력 혹은 언론과의 유착에 대한 보도는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사학비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학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한 채 표면적인 논의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묵인 및 유착 프레임은 개입 및 해결 프레임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와 감독이 비리행위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학비리에 대한 묵인 혹은 기득권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개입 및 해결 프레임은 비리 혹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여 그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사나 수사가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비리에 대한 규제와 처벌 또한 ‘숨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뉴스보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자주성 강조 프레임과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용된 사학의 자주성’이다. 학교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친인척과 측근 등을 중심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자원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유용하면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경영체계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확대될 때까지 다른 학교 구성원들은 모르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학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혹은 ‘돈벌이 수단’, ‘부와 권력의 도구’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한다. 교육을 일종의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 운영에 대한 공공성은 훼손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뉴스 프레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학의 올바른 자주성 이행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학비리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시켜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동안 언론은 공중의 의제가 될 만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의 장에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임해 왔다(김수정·최은경, 2016). 그러나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학비리 관련 보도는 단순관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현상 기술에 주목하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방송사들이 사실을 중심으로 단순중계만 하고 있을 뿐, 사학비리를 바라보는 방송사의 적극적인 해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사학비리에 대한 공중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보도로는 사학비리가 우리사회의 단면으로 치부될 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약 1분 30초라는 방송매체의 뉴스보도 포맷으로 인한 내용 구성적 한계를 비롯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뉴스 가치를 비교적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미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사학의 부패구조에 접근하는 데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의 낙하산 선임구조 등 정치권력에 종속된 형태의 지배구조와 이러한 정치적 통제로 인해 한국언론이 공론장으로써 극도의 위축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사회 교육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비리를 바라보는 방송사의 관점과 태도에 대한 재정립과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학비리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심도 있고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정환(2016)의 지적처럼 사학비리가 재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학재단과 기득권 집단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사학비리의 본질적인 원인과 구조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해야 하는 언론의 의무와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요구된다. 사학비리 관련 뉴스 프레임에서 사건 전달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뉴스 형식에 있어서 대부분 스트레이트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탐사보도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실적으로 언론현장에서는 사학 운영을 둘러싼 복잡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학비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언론은 보다 적극적인 취재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탐사보도 전담 인력과 인프라 구성 등 탐사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사학비리 관련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사학비리의 심각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태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가 결국 구성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 관련 뉴스보도 분석은 사학비리 보도가 공중의 인식과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때 한층 더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쉽지만 이는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또한 정부마다 사학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정부 간 사학 관련 논의를 비교하거나, 정치인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사립학교법을 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56-196.
- 김남일 (2008).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호, 117-151.
- 김성재 (2016, 7월). <사학비리 무보도(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민교협 쟁점토론 2016.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세미나.
- 김수정·최은경 (2016, 9월). <언론이 외면한 사학 비리 신문보도 분석>.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비판과 대안 모색.
- 김용덕 (2014).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2권 제2호, 85-112.
- 박거용 (2010). 상지대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비리사학 문제. <시민과세계>, 18권, 118-133.
- 박민·이시우·박기병 (2012).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6호, 65-92.
- 박부권 (2008).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권 1호, 21-38.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2020 미디어 위원회 실행위원회 (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찬주 (2009).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1권 2호, 115-144.
- 박현식·김성해 (2014).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75-112.
- 송현숙 (2014, 9, 2). [통제 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 사학 뒤엔 '정치인 병풍'.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22155115&code=940401
- 아이엠퍼터 (2010, 9, 13).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URL: <http://impeter.co.kr/1235>
- 아이엠퍼터 (2014, 3, 26). 친일파 설립,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URL: <http://impeter.co.kr/2445>
- 윤정일 (2009). 이명박 정부 사학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세미나, 89-108.
- 이미선·최진봉 (2016). 언론에 나타난 이주민 이미지의 변화. <언론학연구>, 20권 1호, 53-77.
- 이서현·고영철 (2013).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관련 지역일간지의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3호, 26-52.
- 이서현·고영철 (2016). 언론보도에 반영된 지방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소나무재선충병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209-262.
- 이정환 (2016, 7월).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공론장 양극화>. 민교협 쟁점토론 '2016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세미나.
- 이현청 (2001). 사학의 자주성과 사학법인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사학>, 통권 96호, 28-34.
- 장신근 (2014).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 공공신학적 관점과의 대화. <선교와 신학>, 33호, 273-313.

전혁수 (2016, 9, 8). JTBC,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 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65>

최수혁 (2006).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사학>, 115권, 72.

홍덕률 (2006).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0호, 217-240.

Epstein, E. J. (1973).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New York, NY: Random House.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NY: Pantheon Books.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Y: Basic Books.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oston, MA:
Addison-Wesley Pub. Co.

Kitzinger, J., & Reilly, J. (1997). The rise and fall of risk reporting: Media coverage of human genetics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2(3), 319-350.

Sigal, L. V. (1986). Sources make the news. In R. K. Manoff & M. Schudson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NY: Pantheon Books.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투고일자: 2016. 9. 28. 게재확정일자: 2016. 11. 23. 최종수정일자: 2016. 11. 28.

An analysis on Television news frame on irregularities at private schools

Seohyoen Lee

Lecture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Jinbong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Sungkonghoe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elevision news frames related to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have not dealt with underlying problems of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but their reporting have been focused more on stating the situations. While Public announcing frame, Interference and solutions frame, Moral hazard frame and Protests and strikes frame have been applied in reporting, Autonomy highlighted frame and Publicity highlighted frame which are fundamental to the existence of private schools hardly appeared. In particular, the adhesion between private schools and political power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o be a cause of raising problems, whereas articles with such perspectives were hard to find. As a result,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are required to change the way in reporting of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in order for a lively discussion about them as the social agenda.

KEYWORDS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Television News Frame, Autonomy, Publicity